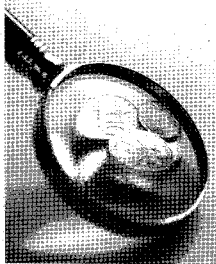




산업동향



- 中企 76.1% “문화접대비 제도 유지돼야”
- 中企 34% “R&D 인력부족 애로”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범사업 개시
-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이 주도했다
- 올 주요기업 설비투자 138조 예상
- 삼성·LG “中企 MRO 영역 침범 안한다”
- 中企 62.4% “청년인턴제 실시로 채용 확대”
- 납품단가 부당인하 현대차에 과징금 정당
- 키코 항소심 첫판결 中企 또 패소
- 中企 85.6% “경제여건 좋지 않다”
- 中企 입사자 39.6% ‘1년내 퇴사’
- 5월 취업자 35.5만명 증가…민간고용 호조세 지속
- IMF “韓 올해 성장률 4.5% 유지…물가 전망은 4.3%로 낮춰”

중소 76.1% “문화접대비 제도 유지돼야”

올해 말로 종료하는 문화접대비 제도에 대해 기업체 10곳 중 7곳 이상이 유지를 희망하고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문화접대비제도는 지난 2007년 공연 관람 등 문화예술 분야에 지출된 접대비가 총 접대비의 3%를 넘으면 기업에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제도다.

중소기업중앙회가 기업 300곳을 상대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73.6%는 문화접대비 제도 유지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중 14.3%는 ‘일몰제를 폐지해영구 존속시켜야 한다’고 대답했다.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26.3%를 차지했다.

특히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문화접대비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 중 문화접대비제도가 연장되거나 영구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대답한 사람은 76.1%로 대기업(66.2%)보다 높게 조사됐다.

실제로 제도가 도입된 후 업체들의 문화접대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 대상 업체들은 도입 첫해인 2007년 평균 6억800만원을 문화접대비로 사용했으나 지난해에는 2배가량 증가한 13억44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들의 접대 문화도 조금씩 변화되고 있었다. 제도 시행 후 기업의 변화 없음이 54.0%로 조사됐지만, 술접대 대신 문화접대가 늘어 내부 직원 만족도가 높아졌다(19%), 거래처 고객에게 문화예술 공연 티켓이 늘었다(15.7%), 제도를 통해 문화예술에 관심이 높아졌다(14.7%)고 대

답한 사람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문화접대비 제도가 연장된다면 보다 실효성 있게 수정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문화접대비가 전체 접대비의 3%를 초과하지 못해 많은 기업들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이원섭 문화경영지원센터장은 “문화접대비 제도 도입 이후 공연 티켓을 선물하고, 도서를 선물하는 등 문화접대가 많이 늘었으나, 문화접대비의 제한요건과 2011년 한시적으로 적용되어 많은 기업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문화접대를 통해 건전한 접대문화 조성과 기업의 문화예술 활용 확대에 문화예술계도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중소 34% “R&D 인력부족 애로”

■ 업종별 R&D 인력 부족 여부

※ 자료 : 대한상의 (단위 : %)

기계	41.9
철강	35.1
전자	33.9
화학	33.3
자동차	29.6
조선	29.2
반도체	29.0

중소 제조업체 3곳 중 1곳은 연구·개발(R&D)인력이 부족해 신제품 개발에 차질을 빚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중소 제조업체 400개사를 대상으로 연구개발인력 현황을 조사한 결과, '현재 R&D인력이 부족하다'는 기업이 33.7%에 달했다. 부족하지 않다는 중소기업은 66.3%였다. 지역별로는 지방기업의 35.0%, 수도권기업의 32.1%가 R&D인력 부족을 호소했다.

업종별로 보면 기계업종의 R&D인력 부족 현상이 41.9%로 가장 심각했고, 이어 철강(35.1%), 전자(33.9%), 화학(33.3%), 자동차부품(29.6%), 조선(29.2%), 반도체(29.0%) 순이었다. 응답기업 24.1%는 연구인력 부족으로 신제품 개발에 차질을 빚은 적이 있다고 답했고 이들 기업 중 '특히 R&D인력이 부족하다'고 답한 비율은 54.0%에 달했다.

중소제조업체들은 현재 평균 12.1명의 R&D인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1년 내 신규 인력을 충원할 계획이 있는 기업은 44.7%로 파악됐다. 단지 중소기업이란 이유만으로 인력 채용 때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고 답한 기업은 절반가량(48.6%)으로 집계됐다.

R&D인력 부족과 채용 애로를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 기업들은 교육·훈련 등 입사 후 성장기회 제공(33.9%), 리크루팅 강화(19.7%), 대학과 산학협력 강화(17.2%), 병역특례제도 활용(5.7%) 등을 꼽았다. 인력난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연구·개발인력 채용 때 정부지원금 확대(41.5%), 정부의 중소기업 근로환경개선 지원(29.9%), 산학협력에 정부지원 강화(12.8%), 고용 정보인프라 강화(11.9%) 등이 꼽혔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범사업 개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범 사업이 7월부터 시작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11일 삼성동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산업·발전 부문 배출권 거래제 종합대응체제 발족식'을 열어 삼성전자와 GS파워, 호남석유화학 등 67개 기업 172개 사업장 대표와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협약을 했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2015년 시작으로 하고 관련 법안을 지난달 국회에 제출했으며, 7월 중 거래 시스템을 열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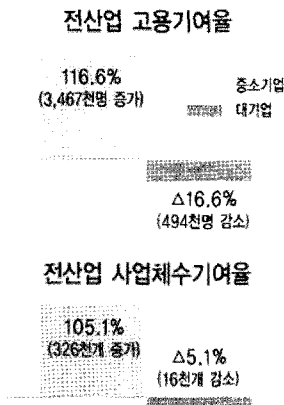
172개 사업장은 에너지목표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최근 배출권 거래제 사업에 참여를 신청한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이며, 내년에는 대상이 산업·발전 부문 378개 업체 800여개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배출권 할당과 관련해 이미 에너지목표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한 사업장에는 에너지 사용량 감축 목표치를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환산해 할당하고, 나머지 사업장에는 동종 업계의 할당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이 주도했다

국내 중소기업들이 지난 10년간 3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등 고용 창출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대기업은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발표한 '중소기업 위상 지표'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종사자 수는 1999년 828만명에서 2009년 1천175만명으로 347만명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대기업 종사자는 214만명에서 165만명으로 49만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사업체 수에 있어서도 중소기업은 273만9천개에서 306만5천개로 32만6천개가 늘어났지만 대기업은 대기업은 1만9천여개에서 3천여개로 무려 1만6천여개나 급감했다. 질적인 측면에서도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중소기업은 제조업부문 부가가치 증가분의 52.7%를 기여한

반면 대기업 기여도는 47.3%에 그쳤다. 특히 금융위 기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혁신형 중소기업수는 매년 평균 23.7%씩 증가해 작년말 현재 4만6044개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부설 연구소 또한 최근 3년간 매년 평균 13.8%씩 증가해 작년말 현재 2만 659개, 연구원수는 14만 1080명으로 확대됐다. 이는 전체 연구소의 94.8%, 연구원의 59.9%를 차지한다.

하지만 2009년 금융위기 회복과정에서 대기업이 수익성과 생산성, 안정성 등에서 중소기업에 비해 크게 개선되면서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현상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인 매출액 세전순이익률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은 2008년 3.26%에서 2009년 3.97%로 소폭 올라갔지만 대기업은 3.81%에서 7.12%로 크게 상승했다. 또 안정성 지표인 부채비율도 중소기업(155.57%→148.13%)보다 대기업(111.46%→96.14%)의 개선 폭이 컸으며, 생산성 지표인 부가가치율도 중소기업이 2008년 23.55%에서 2009년 23.14%로 0.41%포인트 감소하는 동안 대기업은 오히려 19.94%에서 20.72%로 0.78%포인트 증가했다.

올 주요기업 설비투자 138조 예상

올해 주요기업의 설비투자액이 작년보다 14% 늘어난 138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한국정책금융공사는 최근 전국 3천264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올해 설비투자는 비제조업보다 제조업, 중소기업보다 중견 및 대기업, 내수기업보다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됐다.

비제조업 설비투자는 작년보다 11% 증가한 58조6천850억원으로 나타났으나 제조업은 16.3% 증가한 79조8천385억원으로 비제조업보다 5.3%포인트 높았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투자금액을 각각 작년 대비 16.4%, 10.9% 늘어난 98조63억원, 34조5천643억원으로 계획한 반면 중소기업은 3.9%(5조 9천530억원) 줄일 계획이다.

수출기업의 설비투자는 작년보다 20.7% 증가한 65조6천625억원으로 나타났으나, 내수기업은 8.5% 증가에 그쳐 수출기업에 의해 설비투자가 주도될 전망이다.

업종별로는 가방, 신발, 의복, 모피 등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에서 설비투자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자산 형태로는 기계장치 및 운수장비 투자가 각각 15.4%, 20.4%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토지 및 토지개발은 8.6%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은 기계장치에 대한 투자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기계장치 외 건물 및 구축물에 대한 투자비중이 컸다.

설비투자 확대이유를 보면 대기업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행투자를 위해, 중견기업은 노후화된 시설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은 늘어나는 국내 수요에 대비하기위해 투자를 늘릴 것으로 파악됐다.

삼성·LG “中企 MRO 영역 침범 안한다”

대기업의 소모성 자재 구매대행(MRO) 사업이 중소기업 영역을 침범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삼성과 LG는 지난달 25일 “계열사와 1차 협력사의 물량 외에 신규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들 그룹은 또 정부 및 공공기관 물량도 기존 거래가 끝나면 더 참여하지 않고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등을 돕겠다고 강조했다.삼성 관계자는 “삼성 계열사들이 유지·보수·운영과 관련한 소모성 자재를 납품받기 위해 2000년 설립한 아이마켓코리아(IMK)는 앞으로 계열사 및 1차 협력업체 위주로 영업하고 더는 신규 거래처를 확보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과 거래가 많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물량은 기존 거래가 끝나는 대로 더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삼성은 중소기업계와 학계의 추천을 받아 IMK 사외이사 2명을 추가로 선임하기로 했다.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이 당연직으로 위촉되고, 중소기업 관련 교수 1명이 임명될 예정이다.삼성은 이와 함께 IMK 이사회 산하에 학계와 중소기업계 인사가 참여하는 동반성장 자문기구를 설치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모아 해결책을 찾기로 했다.

삼성은 특히 중소기업이 MRO와 관련해 해외 판로를 개척하는 것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LG의 MRO 업체인 서브원도 최근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열린 양측 간 사업조정회의에서 공유유통도

매상들이 요구한 4개 사항을 모두 수용하기로 했다. 서브원은 이에 따라 공구상협회가 원하는 대로 ▲종전 MRO 사업 고객사에 대해 공구유통상에게 불합리하게 거래를 중단하지 않고 ▲매년 초 중소기업중앙회 주관으로 적정 이윤 보장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며 ▲공급회사 변경 때는 협회에 통보하고 ▲2차 협력업체 이하 및 중소기업 진출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받아들여하기로 했다.

삼성과 LG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 강삼중 소상공인지원실장은 “이번 결정은 대기업과 소상공인 모두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베어링판매협회 김윤식 사무국장은 “2차 협력사나 공공시장에서 빠지겠다는 방침은 정확히 명시됐지만, 다른 대기업에 대해서도 납품을 중단하겠다는 방침이 정확히 나오지 않았다”며 “MRO사업 진출이 진정으로 원가절감을 위한 것이라면 당연히 다른 대기업에 대한 공급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소상공인 단체가 결성한 ‘MRO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달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삼성 이외에 다른 대기업들도 MRO 사업방침을 변경하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중소 62.4% “청년인턴제 실시로 채용 확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의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 중 절반 이상이 채용을 확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노비즈협회가 고용노동부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이 사업은 기업이 미취업 청년층을 인턴사원으로 고용할 경우 인건비 등을 보조해주고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이다.

최근 이노비즈협회가 사업에 참여한 2천131개 기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62.4%가 ‘애초 계획보다 채용 규모가 확대됐다’고 응답했다.

응답업체의 38.8%는 애초 채용계획이 없었음에도 인턴을 고용하고 나서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또 경력직 채용 계획을 인턴제를 통한 신규채용으로 바꾼 업체가 12.2%, 인턴의 수만큼 신입사원의 수를 늘려서 뽑은 기업이 11.4%를 차지했다.

이노비즈협회 이수태 회장은 “이 사업이 청년 실업 해소와 기업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앞으로도 우수 기업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납품단가 부당인하 현대차에 과징금 정당

서울고법 행정6부(임종헌 부장판사)는 현대자동차가 하도급 부품 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하지 않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현대차에 과징금 16억여원을 물린 공정위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최근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는 차종 클릭의 재료비를 인하여 수익성을 개선할 계획을 세운 다음, 부품 납품 사업자들이 경영상황과 목적물의 종류 등을 서로 크게 달리함에도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했다”며 “이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2002년 10월께 2003년도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저수익 차종인 클릭의 재료비를 인하여 수익성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현대차는 2002년 12월~2003년 1월 클릭의 부품을 생산하는 20개 업체, 430개 제품의 납품단가를 1.8~2.0%씩 인하했다. 또 이듬해 3~4월 다른 6개사의 납품단가는 3.4~3.5%씩, 이미 인하한 20개사의 경우는 추가로 1.3~1.5%씩 인하해 결과적으로 모두 3.2~3.5%씩 가격을 낮췄다.

공정위는 정당한 이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며 시정명령과 16억9천300만원의 과징금 납부명령 등을 내렸다.

키코 항소심 첫판결 中企 또 패소

환 헤지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를 둘러싼 항소심에서도 법원이 “불공정 계약이 아니다”라며 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16부(이종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증장비 수출업체인 ㈜수신중공업이 키코 계약으로 피해를 봤다며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는 작년 말 키코 사건 91건(118개 기업)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진 이후 나온 항소심의 첫 판단이다.

재판부는 “키코상품은 환율이 일정 범위에만 있으면 기업이 시장보다 높은 가격을 행사하게 보장받는 상품이고 당시 환율 추이와 전망을 고려한 환율의 확률적 분포 등에 비춰볼 때 현저히 기업에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의 공정성은 불리한 조항뿐 아니라 전체 내용을 고려해야 하고, 체결 당시 불공정하지 않았다면 사후 급격한 상황 변화로 당사자 간 현저한 불균형이 생겼다고 해서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키코는 모든 환 변동 위험을 피하도록 설계된 게 아니다”라며 “환율 상승에 대한 손실은 환 헤지를 기대하고 상품을 샀을 때 기업이 부담해야 할 기회비용”이라고 지적했다.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는 원고의 주장도 “은행 측의

설명 정도와 원고의 거래 경험, 달러화 2배 매도에 따른 손실을 본 경험 등에 비춰 손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움직이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환율로 외화를 팔 수 있지만, 환율이 지정된 상한선을 넘으면 계약금액의 2~3배를 시장가격보다 낮은 환율로 팔아야 하는 통화옵션 상품이다.

계약 후 환율 급등으로 피해를 본 기업은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주장하며 2008년부터 무더기 소송을 냈으며 은행은 상황 변화를 이유로 계약을 부정해서 안 된다고 맞섰다.

1심 재판부도 “키코가 구조적으로 불공정하거나 환 해지에 부적합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며 기업 측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피해 중소기업들을 또 한 번 외면한 판결”이라며 “다시는 키코 같은 금융사기가 관치지 않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중소 85.6% “경제여건 좋지 않다”

중소기업의 85.6%가 원자재가 상승에 따른 채산성 악화 등으로 최근 경제여건이 좋지 않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물가·원자재가격 안정

등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 506개 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경제동향과 하반기 경기전망’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82.2%가 ‘국내 경제 여건이 좋지 않다’고 답했다. 반면 좋다는 응답은 17.8%에 그쳤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여건이 나쁘다고 답한 비율이 85.6%(좋지 않다 67.9%, 매우 좋지 않다 17.7%)로 대기업의 75.3%(좋지 않다 66.3%, 매우 좋지 않다 9.0%)보다 높게 나타났다.

체감 경기가 좋지 않은 이유(복수응답)로 기업들은 수익성 악화(50.5%)를 가장 많이 꼽았고, 수출·내수 등 판매 부진(31.0%), 자금 사정 악화(26.7%) 등이 뒤를 이었다.

중소 입사자 39.6% ‘1년내 퇴사’

중소기업의 경우 신입사원을 뽑아도 10명중 4명꼴로 1년안에 퇴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입사지원자의 ‘스펙’이 좋더라도 조기 퇴사할 것 같으면 뽑지 않는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대·중견·중소기업 406개사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신입직원 조기퇴사 및 기업의 대응현황’을 조사한 결과, ‘스펙이 우수한 지원자라도 조기 퇴사 가능성이 크면 채용하지 않는다’는 기업이 전체의 80.0%에 달했다. 기업규모별로

는 대기업 74.5%, 중견기업 80.3%, 중소기업 83.1%로 나타났다.

신입직원 채용 때 가장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항목을 묻자 스펙에 해당하는 경력, 전공 등을 꼽은 기업은 36.5%에 그친 반면 인·적성 분야에 속하는 적극성, 조직적응력 등을 중점적으로 본다는 기업은 63.1%를 차지했다. 기업들이 퇴사가능성까지 고려해 신입직원을 채용하고 있지만 많은 직원이 입사 초기에 퇴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9년 채용한 신입직원의 입사 1년 이내 퇴사비율을 보면 대기업이 13.9%,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23.6%, 39.6%로 집계됐다. 퇴사사유로는 '업무가 전공·적성과 맞지 않아서'가 35.7%로 가장 많았고, 연봉·복지후생 불만족(21.2%), 근무여건 불만족(15.0%), 조직문화 부적응(11.8%) 등이 뒤를 이었다.

5월 취업자 35.5만명 증가... 민간고용 호조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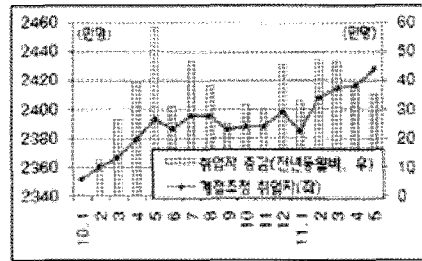
지난달 취업자가 8개월 연속 30만명 이상 증가하는 등 고용시장의 견조한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5월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5만5천명이 증가했으며, 고용률은 60.1%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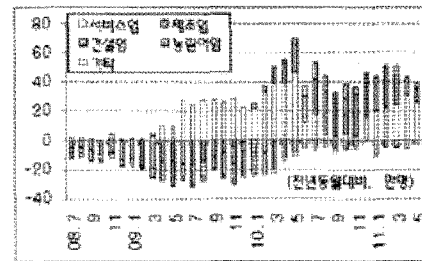
제조업(+10.1만명)과 서비스업(+26.0만명) 중심의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됐으며, 상용직도 63만명이나 늘며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비중이 60%를 넘어섰다.

<취업자·취업자 증가>



<산업별 취업자 증가>



실업률은 3.2%로 전년동월과 동일한 수준이었으나, 실업자는 81만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6천명 늘었다.

청년실업률은 경기 회복에 따른 구직활동 증가, 지방 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실시 등의 요인으로 전년동월대비 0.9%p 상승했다. 지난해에는 모든 지자체에서 9급, 소방직 등의 필기시험이 6월 고용동향 조사주간에 실시됐으나, 올해는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서 5월 조사주간에 치뤄졌다.

한편, 재정부는 6월 고용 전망과 관련해 30만명대의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이라며, 고용개선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유인형 제도 개편 등 구조개선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IMF "韓 올해 성장률 4.5% 유지… 물가 전망은 4.3%로 낮춰"

국제통화기금(IMF)은 17일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에 대해 종전 4월 전망치인 4.5%를 유지했으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3%로 0.2%p 낮췄다.

수비를 랄(Subir Lall) 단장이 이끄는 IMF 연례협의단은 지난 2일부터 17일까지 한국을 방문, 정책당국 및 주요 기관들과 연례협의를 마친 뒤 이같이 밝혔다.

IMF는 결과발표문을 통해 글로벌 위기를 극복한 한국 경제는 견고하고 지속가능한 확장세로 전환됐으며 올해 성장률은 성장잠재력을 넘는 4.5%로 전망되고, 내년에는 4.2%로 완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수비를 랄 단장은 브리핑 자리서 "한국 경제는 활발한 확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완전히 회복됐다"고 말했다.

IMF는 또 한국경제의 강한 성장활력에 반해, 거시경제 및 재정 정책의 초점이 물가상승 압력을 억제하고 취약성이 확대되는 것을 제한하는데 맞춰진 것에 동의하며, 시의적절한 경기부양책의 철회, 지금까지의 정책금리 인상은 환영할만하다고 밝혔다.

다만 IMF는 통화여건은 지금 단계에서 느슨하게 남아있으며 연착륙을 위해선 더 꾸준한 통화 긴축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수비를 랄 단장은 "하반기에는 국내 수요측 압력이 인플레이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현재 금리는 국내 물가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꾸준한 금리인

상이 물가 상승과 인플레이 기대심리 통제에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IMF는 이날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수정치를 발표하면서, 직전 전망치(4월)에 비해 일본(1.4%→△0.7%)과 미국(2.8%→2.5%)의 올해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반면, 독일(2.5%→3.2%)과 프랑스(1.6%→2.1%)의 성장률은 상향 조정했다.

세계 물가 전망과 관련해서선 선진국의 물가상승률은 0.4%p 상향조정한 2.6%로 내다봤으나, 신흥국은 당초 수준(6.9%)을 유지했다.

IMF는 또 당초 전망시에 비해 세계경제 하방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선진국은 유럽주변국의 재정위기, 일본지진 여파 확대, 미국경제 회복지연 등을 언급했다. 아울러 신흥국에 대해선 과열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긴축적 거시정책, 환율 유연화, 거시건전성 정책 등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IMF 연례협의단이 17일 한국과의 연례협의 결과 브리핑에 앞서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지 선정을 응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지난해 브리핑 때 2010 남아공 월드컵 기간임을 감안, 붉은악마 복장을 해 눈길을 끌었다.